

‘늪어가는 전남’ 농림어가 급감

지난해 농림어업 절반 ‘고령자’...농업인 70세 이상 39% 가장 많아 전남 농가 1만 1600가구 감소...올해 전국 농가인구 200만 붕괴 예상

지난해 전남지역 농·어·임가 수가 1만 16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농가와 임가에 이어 어가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올해 농가 인구 200만명 선 붕괴가 예상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전년 대비 3.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어가와 임가 역시 지속 상승해 각각 50.9%, 56.4%를 기록했다.

농·어·임가 모두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어가는 지난해 전년보다 2.9%p 올라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이는 도시를 포함한 국내 고령인구 비율(19.2%)보다 31.7%p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는 97만 4000가구로 전년(99만 9000가구)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만 9000가구로 전년 대비 5600가구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경남(-3300가구), 경북(-3200가구), 충남(-250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1년 전(208만 9000명)보다 4.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매년 5만명 이상의 농가 인구가 줄었던 점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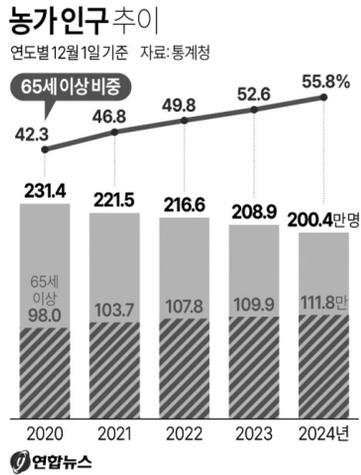
하면, 올해 농가 인구는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령별로는 전체 농가인구에서 70세 이상(78만 5000명)이 39.2%로 가장 많았고, 60대(61만 1000명), 50대(28만 1000명) 순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농가인구는 1년새 2.3% 증가했으며, 10세 미만(-21.0%), 10대(-14.4%), 30대(-6.9%), 40대(-11.5%), 50대(-10.0%) 등 다른 연령대 인구는 모두 감소했다.

어가 역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감소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어가는 4만 9000가구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전국 최대 수산지인 전남(-2000가구)을 비롯해 경남(-2000가구), 제주(-2000가구), 강원(-2000가구) 등 전국에서 감소했다.

어가 인구는 2024년 기준 8만 4000명으로 전년(8만 7100명) 대비 3.6% 줄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48.0%에서 50.9%로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2만 9000명(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세 이상(2만 7000명·32.3%), 50대(1만 2000명·14.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인구는 1년동안 5.1%나 증가했고, 이 밖에 모든 연령대에서는 어가 인구가 감소한 만큼 당분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해 국내 임가 역시 9만 8000가구로 전년보다 1.2% 줄었다. 이에 따라 임가인구는 19만 9800명으로 2.2%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북(-9000가구), 특·광역시(-7000가구), 전남(-4000가구)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임가 인구도 70세 이상 인구 비중이 38.3%로 가장 많았고, 60대(34.0%), 50대(14.2%) 등 고령층 순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기름값·전기로... ‘에너지비용’에 짓눌린 농가

농작업 기계화 시설·스마트팜 시대 지원 확대해야

기름값과 전기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해마다 농사를 짓는 비용의 경영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된 것이 배경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 9000원으로 전년(2511만9000원)보다 6.6% 뛰었고,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173.7(202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농업용 면세유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데, 지원금 규모가 꾸준히 줄고 있어서다.

농어민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거의 실비로 제공하는 면세유 정책은 지난 1972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면세유 제도 덕분에 농업인들이 기름값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웃과 나눠쓰는 면세유 인심도 생겼다. 또 한때 농업용이 아닌 차에 몰래 넣거나 주유소에 통째로 파는 등 부정 유통과 미사용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면세유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면서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계 값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로 다가오는데

말이다. 물세보다 더 싸다는 전기료도 요즘은 농업 경영비를 높이는, 농가의 골칫덩이로 자리 잡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다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물으면서 실무 차원의 협조도 이미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상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가 큰 농어가로, 지난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정부가 농사용 전기를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식량안보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듯하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전이 이러한 명분을 포기한 채 300kW 이상의 계약전력 농어가에 한해 농사용보다 훨씬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고통을 소비부진 등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농어가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듯하다. 잘못된 판단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우리 농업인이 내야 하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정부가 나서 농업 경영비를 낮추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해, 전하지대본인 농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하다. /bigkim@kwangju.co.kr

농어촌 디지털 전환 속도

농어촌공사, 전남대와 협력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7일 전남대와 ‘인공지능·데이터 및 정보보안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촌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협의회 자료 참여 등 전문가 공동 활용, 관련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대학생 진로 탐색과 취업 활동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등 공동 연구 기획 등을 협력한다. /장윤영 기자 zjang@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지난 17일 전남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벼·고구마·옥수수 안정보험 가입하세요”

농가 수입 하락하면 소득 보상

농가소득 안정성을 강화,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2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판매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피해 등에 더해 시

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작목별 수입(보험 가입 연도)이 기준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대상 작목은 벼·고구마·옥수수 등 3개 품목으로, 1000㎡ 이상 면적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이 가

능하다. 벼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영광군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고구마, 옥수수는 모든 농업인에게 열려 있다. ha당 평균 보험료는 고구마 207만원, 옥수수 169만원이다. 전남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5%를 지원, 농가에서는 자부담 15% 수준으로 고구마 31만원, 옥수수는 2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치 불법 어구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20일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이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어구견인제’를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그간 불법 어구를 철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을 초과했거나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유실 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